시 론

지역 사립대학의 지속가능성은?



신 춘 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 사립대학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과 인건비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비 상승은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대학이 신입생 충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특히 광주·전남의 사립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광주의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산업과 전남의 에너지, 농생명,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역 사립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

이제 지역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를 개별 대학의 자구노력이나 정부지원에만 의존해 해결하기는 어렵다.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세법은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교육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수익용 부동산의 지방세 부담, 교육시설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은 대학의 실질적인 교육재원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대학 운영비와 장학금, 교육시설 투자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공익적 기여도를 조세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역시 AI 교육시설과 첨단 실습기자재 등 대규모 교육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기한과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와 교육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별도의 세제·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물론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익사업에 조세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 조세지원은 교육목적 재투자 실적과 회계투명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며, 지원받은 재원이 실제 교육과 연구에 사용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회계·세무 교육은 대부분 영리기업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관련 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학교법인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등 복합적인 회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육재정의 공공성과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과 사용, 수익사업 소득의 구분경리, 기부금의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사업의 구분, 법인세 신고 및 사후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회계오류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대학의 회계·세무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에 특화된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법인 회계, 공익법인 세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실무, 기부금 관리, 내부통제 및 회계감사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AI와 ERP를 활용한 비영리 회계·세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재무데이터 분석과 회계처리 자동화, 이상거래 탐지, 세무신고 및 내부통제 실습을 교육에 접목한다면 학교법인의 재정관리 효율성과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 사립대학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에 달려 있지 않다. 학교법인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이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영리 회계·세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지역대학을 살리는 것은 곧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학교법인의 재정자립을 뒷받침하는 조세제도 개편과 비영리 회계·세무 전문인력 양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지역 사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현장칼럼

골든타임을 지키는 양보,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어야



류 혜 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최근 경북에서 화재 진압 도중 중상을 입은 소방관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경찰이 싸이카와 순찰차를 동원해 약 23㎞ 구간을 단 20분 만에 호송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다행히 해당 소방관은 위급한 고비를 넘기고 치료 중이라고 한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노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소식이었다.

특히 이송된 소방관의 가족 또한 구급대원이라는 사실과 그 가족이 남긴 "모든 동료가 오늘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퇴근하기를 바란다"라는 인터뷰는 깊은 울림을 준다. 위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평범한 우리 이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들의 헌신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겨온 것은 아닐까.

'골든타임', '모세의 기적', '출동 시간 단축'. 이런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위급한 환자를 싣고 달리는 긴급자동차를 떠올린다. 과거에 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시민 의식이 성숙해졌다. 실제로 10년 전만 해도 일반 운전자 대상 설문에서 긴급 출동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설문(1천629명 참여)에서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사람은 2.1%에 그쳤다.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6%였다.

하지만 도로 위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SNS에서는 긴급 차량을 위해 도로를 비켜준 훈훈한 미담에 '좋아요'와 찬사가 쏟아지지만, 정작 운전대를 잡으면 길을 터주지 않거나 망설이는 모습도 적지 않다.

이러한 양보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는 일부의 그릇된 행태다. 일부 사설 구급차가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개인 이동 수단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운전자들의 불신을 키운 탓이다. 마치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 사이렌이 잦아지면 도로 위 운전자들은 진짜 응급 상황마저 의심하게 된다. 그 결과 1분 1초가 급한 실제 환자가 통행 방해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그 피해자는 무고한 시민일 수도, 바로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일 수도 있다.

물론 제도적 보완도 이어지고 있다.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 원)이 부과되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도 도입·확대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에 관련 문항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스템 구축 편차와 단속만으로 모든 도로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장의 위험도 크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발생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644건 중 46.7%(301건)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출동 및 환자 이송 중 일어난 사고 역시 전체의 약 68%를 차지한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순간에도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셈이다.

결국 제도의 완성도를 채우고 골든타임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실천'이다. 화면 속 미담에 누르는 '좋아요'는 감동을 줄 뿐이지만, 도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옆으로 비켜서는 단 1초의 결단은 생명을 살린다. 뒤에서 울리는 사이렌은 결코 다른 이의 일만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기 위한 절박한 구조 신호이자, 위험의 최전선으로 달려가는 제복 입은 이웃이 "오늘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다.

사이렌의 주행로 끝에 서 있을 사람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일 수 있다. 긴급자동차에 길을 내주는 일은 배려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문화이자 습관이 되길 바란다.

독자투고

겨울철 한랭질환, 철저한 대비가 최선이다



겨울철 한파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다. 급격한 기온 저하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한다.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전국에서 364명의 환자와 14명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79.7%가 저체온증 환자였고 전체 환자의 57.4%와 사망자의 78.6%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예방의 핵심은 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외출 전 체감온도 등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한파가 예상되는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할 때는 얇은 옷을 여러겹 겹쳐 입고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적극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서도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주변에서 한랭질환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따뜻한 곳으로 옮겨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보온해야 한다.

이때 동상 부위를 함부로 문지르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음료를 먹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의식 저하나 호흡 이상 등 위급한 증상이 보이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이웃의 난방 상태를 살피는 사회적 관심도 절실하다. 외출 전 날씨 확인과 체온 유지, 이웃을 향한 작은 실천을 통해 올겨울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계절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소현 목포소방서 하당119안전센터〉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미래 교육의 출발점돼야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연대 구축에 나선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3일 나주역 사건을 계기로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학생 중심의 항일 독립운동이다. 특히 일제의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저항했으며,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학생운동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처럼 우리들 가슴 속 깊이 중요한 독립운동으로 기억되고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전남광주교육청이 전국 교육연대 구축에 팔을 걷어부친 사실은 미래세대에 역사의 가치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K-민주주의 교육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교육 연대망 구축, 발상지 학교와 현장을 잇는 '의(義) 역사 체험벨트' 구축, 320개교 네트워크 및 미발굴 유공자 국가서훈 신청, 'K-민주주의 전당'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교육·기념사업 등 4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다 전국 교육계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적 연대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반영되도록 역사학계·집필진과 소통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 생태계도 구축한다.

또 전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학생독립운동 100주년 선언문'을 공동 선포하고 '전국 청소년 평화·독립 문화제'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 국가추진위원회의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역사교육은 교과속 지식 전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내외 320개 학교 학생들이 1929년 당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용기로 불의에 맞서 행동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100주년 기념사업이 지역 행사를 넘어 전국 교육계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적 연대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는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은 과거를 기념하는데 만족해서는 안되며, 미래의 역사교육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들 불편 가중 안된다

9년 만에 전면 개편된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편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한다면 행정기관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후속 조치 말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와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대비해 지난달 31일부터 광주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더 빠르고, 더 촘촘하고, 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교통취약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정된 시내버스 운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 시민들은 평소 이용하던 버스를 찾지 못하거나 환승·도보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여기에다 일부 정류장에는 이전 노선표가 철거되지 않은채 새로운 안내판과 함께 게시되는 허점까지 드러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노선은 정확한 정보가 필수인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전남광주시는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모든 정류장의 안내판과 노선도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노선 변경으로 인해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거나 환승도 불가피했다는 불만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단지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도보 이동 시간과 환승 부담을 떠넘겨선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약자에게 이같은 변화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환승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전남광주시가 오는 12월까지 실제 운행 상황과 시민 민원 등을 분석해 환승 불편과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노선을 추가 조정하겠다는 계획은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버스 이용자들의 현장속에 찾아가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교통 개편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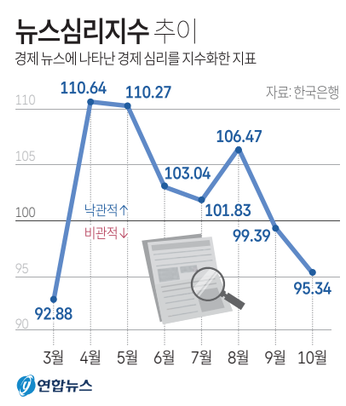
성장률 오르는데 체감은 냉랭…뉴스심리지수 7개월만 최저

지난달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수출 호조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졌지만, 주가 하락과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국민의 체감 지수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월간 뉴스심리지수는 95.34로, 전월(99.39)보다 4.0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로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지난 3월(92.88) 이후 최저치다.

지수는 4월에 110.64로 오른 이후 8월까지 100-110 안팎을 기록해 왔다가 9월 99.39로 100 이하로 떨어졌고 10월 추가 하락했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국내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경제 분야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이 지수는 통상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1개월 정도, 제조업 업황 BSI보다 2개월 정도 각각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지수 하락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하락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차주들의 상환 부담 증가가 겹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瀕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광고국		FAX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편집국 650-2017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업무국 650-2019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